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회 북핵포럼 세미나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China-North Korea Nuclear Collusion and Future Security Order in Asia)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 로 그 램 】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전체사회 : 남광규(고려대 SSK연구사업단 교수)
14:00~14:05	개회사 : 이영조(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
	제 1 부 사회 : 김태우(북핵포럼 대표)
14:05~15:15	【주제발표 1】 북핵 해결 전망과 동북아 안보질서: 한국 세부주제: 반중 안보질서 부상 경고 발 제: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중국의 북핵정책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일본 세부주제: 일본의 핵무장 능력과 반중 핵협력 가능성 발 제: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제발표 3】 중·북 핵공모의 위험성과 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 대만 세부주제: 중북 핵공모에 의한 안보균형 붕괴 가능성과 아시아 국가들 간 핵무장 협력 필요성 강조 발 제: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15:15~15:30	Break time (15')
	제 2 부 사회 : 김태우(북핵포럼 대표)
15:30~16:20	【토론 1】 송영선(前 국회의원/경남대 석좌교수) 【토론 2】 송대성(前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토론 3】 이영조(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4】 김민석(중앙일보 기자/前 국방부 대변인) 【토론 5】 정충신(문화일보 부장)
16:20~16:50	토론 및 질의 응답
16:50~17:00	폐회식

【 목 차 】

발 제

- 북핵 해결 전망과 동북아 안보질서 : 한국 ————— 09
이 춘 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중국의 북핵정책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일본 ————— 17
서 균 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중북 핵공모의 위험성과 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 대만 ————— 27
린치하오 (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토 론

- 송 영 선 (前 국회의원/경남대 석좌교수) ————— 37
- 송 대 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 39
- 이 영 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41
- 김 민 석 (중앙일보 기자/前 국방부 대변인) ————— 43
- 정 충 신 (문화일보 부장) ————— 49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회 북핵포럼 세미나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China-North Korea Nuclear Collusion and Future Security Order in Asia)

발 제

[주제발표 ①]

북핵 해결 전망과 동북아 안보질서 : 한국

- 반중 안보질서 부상 경고 -

이 춘 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북한의 핵문제는 역설적이고 난감한 문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많은 전문가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이래도 북핵을 방지 한다면 3년 이내에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리라고 예측했다.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말은 핵무기를 유용한 전략 수단으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어느 정도에 도달 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쉽게 말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이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해서 실전 배치를 완료 했는지(즉 핵무기체계를 보유하는데 성공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정보는 없다. 북한이 핵폭탄을 장착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아직 해 보인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전략이란 항상 불리한 상태를 가정하고 짜야 하는 일이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일이 맞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핵무기는 보통 무기와 달리 인류 절멸(人類絶滅)의 무기다. 그런 무기를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 할 경우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체계를 완성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우리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아직도 완성된 핵무기체계를 가지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과감하게 반응 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가 확실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작은 도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작은 전쟁이 큰 전쟁을 비화 될 경우 우리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가정할 수 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 보이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면,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해결된 전망이 거의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북한은 사실상 거의 다 완성해 놓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할 수 있

는 일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 없애는 것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손 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북한 핵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경우 국가들의 안전 보장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한다. 두 가지 측면이란 Deterrence(전쟁억제)와 Defense(방어 혹은 방위)이다.

Deterrence는 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조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Deterrence 가 실패하고 적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싸워서 이기면 된다. 적이 자신의 전쟁 도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Defense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경우가 두 가지 논리가 다 적용 된다. 우선 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방안을 강구하고, 그론데도 적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를 격파 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시대에 들어 온 이후 Defense라는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 하게 되었다. 핵무기는 한발만 맞아도 도시 하나가 궤멸 되어버리는 판국에 방위라는 용어 그 자체가 무의미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핵공격은 방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핵시대의 전략 이론은 특히 ‘Deterrence : 전쟁억제’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전쟁이 한 번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시대에서 핵보유국들 사이에는 War Fighting Strategy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으라고 애썼다.

우리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북한 핵 제거(북한 핵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이 아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즉 남북한 간에 전쟁 억지상황을 구축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2. 북한 핵의 현황

북한은 지난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 했다. 2006년 이래 핵실험은 매번 3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단행되어 왔지만 2016년에 들어서는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6차, 7차 핵실험을 단행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 정말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실전 배치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 왔다는 의미다. 파키스탄의 경우

6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

핵무기는 폭탄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결합 될 경우 무기로 완성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몇 개의 핵폭탄을 가졌는지 발표한 적이 없지만 국제적인 자료들을 종합하면 적게는 6발 많게는 16발정도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문자 그대로 핵무장국가(Nuclear Armed State)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까지는 북한이 자신이 보유한 핵폭탄으로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는지, 즉 북한의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훌륭한 폭격기는 없는 상태다.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은 미사일인데 그동안 북한의 핵폭탄은 상대적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에 장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작게 그리고 가볍게(소형화, 경량화)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투사중량(Throw Weight, 投射重量)을 늘이는 노력을 줄기차게 단행했다. 핵폭탄을 작게 만드는 동시에 더 크고 무거운 폭탄을 탑재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진행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1차부터 5차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더 큰 지진을 야기 했는데 이는 파괴력이 점차 막강해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폭탄은 파괴력은 늘어나는 동시에 크기는 줄어드는, 즉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북한은 소형화 된 핵탄두를 성능이 개선된 미사일들에 장착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의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 system)는 완성되는 것이며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전략적 균형은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핵무기가 아닌 어떤 무기도(그것이 킬 체인 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핵무기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핵무기는 대도시라도 한방에 전멸시킬 수 있으며, 불과 몇 발로도 웬만한 나라를 통 채로 멸망시킬 수 있는 공포의 무기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절대무기(絶對武器, Absolute Weapon)”라고 부른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절대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핵기술보다 오히려 더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핵폭탄이 아닌 재래식 폭탄을 탄두로 장착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들은 대한민국 어느 곳도 공격할 수 있으며 최대 알래스카 정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작업은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하는 일 뿐이며 그 일이 완성 될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

3. 북한의 핵전략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대폭 넓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요 표적들을 핵 공격 할 수 있게 된 북한은 한국에게 각종 요구를 할 것이다.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교수의 설명처럼, 대한민국은 핵무장 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냐(즉, 미리 항복할 것이냐) 혹은 거부하다가 핵 공격에 의한 파멸의 위협을 감수할 것이냐(즉, 싸우다 죽을 것이냐) 등 두 가지 옵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들’이 많다.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 없이 한국과 단둘이 현재의 상황을 결판내기 위해서다.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 김정일이 했다는 말이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김정일은 전략과 전쟁의 ‘역설적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체계를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염려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략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언급인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노력이 자멸을 초래할 허무한 것으로 보여 질 것이다.

대한민국 전역을 핵공격 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의 대도시인 시애틀, LA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막는 한편 한국을 마음껏 협박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공격 할 것이라고 위협만 해도 한국은 대책이 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협박이 안 먹힐 경우 소규모 도발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어느 한도가 넘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 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북한에 이러 저리 끌려 다니다 결국 항복하는 방안 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과도 진짜 전쟁은 벌이지 않은 채 한국을 적화 통일 하는데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북한 판 평화통일을 위해서인 것이다.

4. 한국의 대책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예의 주시” 해왔고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대응 한다고 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다.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퇴보한 적이 없었다. 예의 주시라는 말은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하게 관찰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예의주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방해 하겠다 혹은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단행 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300Km를 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패’ 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이 실험을

‘성공적인 실패(successful failure)’라고 평가 했다. 북한은 물속에서 발사 된 미사일이 공기 중으로 솟아올랐을 때 다시 분사장치가 가동되는 기술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북 핵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우리는 마치 진짜 총으로 무장한 권총 강도를 만난 불쌍한 행인의 처지가 될 것이다. 불쌍한 행인은 돈을 빼앗기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북한에 흡수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춘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핵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을 굴복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보유 노력은 북한판 평화통일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 공격해서 잿더미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을 지금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북한의 핵전략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핵무기 발달사를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 상대방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나라들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 하든가, 적의 핵무장을 무력공격으로 사전에 차단 하든가 혹은 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든가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곧 완성할 즈음, 우리의 대책도 몇 가지 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 것이다. 소위 ‘이스라엘 식’ 방안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식 옵션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이후 ‘이스라엘 식 옵션’은 원천적으로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절박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도 북한이 보유한 그런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것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장은 핵 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deterrence)력을 보유하자는 말이다. 이제 문자 그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임계점을 넘었다. 대한민국의 생(生)과 사(死)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위의 방안 몇 가지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 했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가정아래 전면 철수시켜 버렸다. 이스라엘처럼 상대방의 핵시설을 사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폭격 작전을 감행하려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격렬한 반대로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자 핵무장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후 우리의 옵션은 단 두 가지가 남는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교수의 글이다. ‘다투는 두 나라 중 한나라는 핵무장을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는 핵보유국의 핵에 맞아 죽든가, 혹은 무조건 항복하든가 등 두 가지 옵션만이 남는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대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는 죽기보다는(전쟁) 김정은 아래 들어가 사는(아무리 나쁜 평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바로金正은의 핵전략이 추구하는 목적 아닌가?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이 북한 핵전략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5. 북한 핵과 동북아 국제질서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실전 배치, 한국의 주요 표적들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변민해야 할 날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와 장군들, 외교관들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17일자 뉴스위크지는 ‘김정은이 우리를 핵공격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직후 미국의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 해군 대장 역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미국도 이정도 위험을 느끼는 데 한국에 대한 위협은 문자 그대로 생사(生死)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죽게 생겼는데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논한 다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북한 핵을 원천적인 위협으로 볼 필요가 없는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다가 멸망하는 것 보다 핵을 가진 채로, 비록 말썽꾸러기라 할지라도 생존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동안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의존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나타난 바대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핵의 위협(사실 북한이 미치지 않은 한 일본을 핵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에 대처하고자 하며 기회를 보아서 독자 핵무장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 핵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약간이라도 순응적으로 변한다면 미국은 북한 핵을 폐기가 아닌 동결로 바꿀 수 있다. 미국도 진정한 군사적 의미에서 북한 핵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미국을 핵 공격 하는 순간지구 상에서 소멸 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북한 핵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무기 체계다.

* 필자가 그동안 작성 했었던 관련 글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MEMO

[주제발표 ②]

중국의 북핵정책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일본

- 일본의 핵무장 능력과 반중 핵협력 가능성 -

서 군 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세계대전, 그리고 버섯구름

일본 핵개발 역사는 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포화 속에서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설계조차도 엄두내지 못한 채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의 원자폭탄 2발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을 피어오르게 했던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소련과의 필연적인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보인다. 원폭을 전장(戰場)이 아닌 도시(都市)에 투하한 것은 피해규모를 극대화해 정치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뜻에서였다.

사실 핵무기의 위력은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미국만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던 것은 아니다. 소련도, 독일도, 일본도, 모두 핵을 갖고자 했다. 두 번에 걸친 원폭 투하가 증명한 것은 단순히 미국이 막강한 무기를 처음으로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미국이야말로 이 가공할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었다.

핵의 유혹에 빠지다

현재 일본엔 1960년대 지은 도카이 재처리 공장과 도카이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지만 마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핵폭발 장치의 제조나 연구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일본 내의 모든 핵물질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조치의 엄수와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맺은 조약에 따라 감시되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서독에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국제적으로 감시해도 핵분열 물질을 5% 정도 빼돌리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므로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보통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의 수출입 과정에서 물량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 틈새를 노렸던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끊임없이 핵의 유혹에 빠졌다.

2010년 일본이 원전에 사용한 5% 저농축우라늄은 1600톤이다. 1969년 일본 외교관의 발언을 적용하면, 1600톤에서 80톤 정도는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5% 저농축우라늄 80톤은 농도 100%

고농축우라늄 4톤에 상당한다.

100% 고농축우라늄 5kg이면 폭발효율이 20%라고 할 때, 즉 1kg만 연쇄반응하고 나머지는 날아가더라도, 재래식 화약 삼질화톨루엔 TNT 20 kt, 즉 2만 톤급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800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플루토늄도 핵무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북한은 40kg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40톤 가까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보다 1000배에 많은 양이다. 미국과 프랑스, 국제원자력기구와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지만 동북아 정세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공화당 정부 출범과 함께 격랑이 예상되는 만큼 뒷집 지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

1977년 JCO, 즉 일본핵연료변환회사는 마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도카이에 재처리 공장을 지었다. 1992년 12월 로카쇼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2006년 3월에는 재처리 공장을 완공하였다. 2016년 현재 상업용 재처리 공장은 전 세계 5개국, 즉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가동 중에 있다. 일본 빼고 네 나라 모두 공식 비공식 핵보유국이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국제 규제대상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 일본에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으나 마일 원자력 협정에 의하여 20%이상으로 농축하려면 미국과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미사일을 날리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 해군 구축함에도 함대지 미사일의 보유가 금지되며, 공군 전투기에도 공대지 미사일의 장착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2005년 관방장관 당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보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6년부터 시험 발사를 하면서 1970년에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다. 고체연료 로켓으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75년에는 미국에서 기술 도입한 액체연료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다. 당시로서 탄도 미사일은 우주발사체와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현재에도 미사일은 없는데 발사체만 보유한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업용 로켓과 탄도 미사일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반면에, 2006년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부에 한국이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면 핵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저지하려 하였다. 한국은 1978년 사거리 165km의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당시 미국은 사거리 1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명증률과 비용 대 효과의 문제로 핵미사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핵개발 반대는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전 세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우주발사체 또는 관측 로켓이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고체로켓을 개발, 발사해 왔다. 일본은 초기에 연필만한 로켓, 아기만한 로켓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려 하고, 탄도 미사일은 가급적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고체로켓은 장시간의 액체연료 주입과정이 없어서 정찰위성 등에 사전 포착이 안된다. 고체연료 핵미사일은 미사일 제작 시 미리 연료를 장착하여 수십 년간 지하 사일로에 보관하다가 유사시 바로 쏘기만 하면 된다. 이렇듯 고체연료로켓은 신속성이 있어 전장에 쉽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대형 고체연료로켓 제조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운반체로는 M-V 로켓 2000년 최초발사, 3단 고체로켓, 중량 140톤, 화물 1800kg 과, 엠실론 로켓 2013년 최초발사, 3단 고체로켓, 중량 90톤, 화물 1200kg이 있다.

핵무장은 시간문제

아베 신조 총리는 관방 부장관 시절인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의 설계, 생산, 배치, 실험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며칠 만에 수백기의 미사일에 간단하게 핵탄두만 조립하면, 바로 목표지점을 향해 발사할 수 있게끔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액체연료처럼 주입과정 없이 곧바로 쏘 수 있다.

영국의 제인스 그룹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영국과 비슷하게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조립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조립할 수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본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처음엔 거부하였는데, 이는 원전에 핵무기를 은닉한 것이 발각될까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중국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부인했다.

일본에서는 원자로에서 태우고 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를 위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고속증식로,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플루토늄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은 핵분열 물질의 생산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핵연료 주기의 실현은 일본 핵무장의 전조등이기도 하다.

일본 원자력발전은 전력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고 겉으로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자연스레 무기로 전용될 것이 자명하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며,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이미 10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

다고 전해진다. 2kg 소형 핵탄두 5000발 분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제치며 단연 압도적이다.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결국 전후의 일본 지배층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원자력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원자력발전 추진의 숨겨진 진실일 수도 있다.

원자력의 이면(裏面)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 아래 그간 발전을 거듭해 온 원자력의 이면에는 현재까지 미결과제가 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이 그 방증이다. 어떤 전문가도 이런 대형사고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원자력의 결합 중 방사능 문제가 있다. 핵분열을 통해서 다량다종의 파편과 플루토늄 등 소위 악티나이드 물질이 생겨난다. 원자력 발전 자체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지만 방사성 물질 배출은 치명적인 것으로 어떤 화학 처리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수만 년간 땅속 깊이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다.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000년, 이는 현대문명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무해화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전은 아직 미숙한 기술이다. 물론 핵변환이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긴 하나 이는 원자력을 연장해줄 순 있을지 몰라도 소생시킬 순 없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열도를 강타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과 함께 INES, 즉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고인 7단계 대형사고로 기록되었다. 지금도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간 떠들썩하게 지었다던 동토차수벽, 즉 전기로 땅을 얼려 방사성 지하수가 인근 태평양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지하시설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핵무장이냐 핵우산이냐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국 대선에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러웠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기자와 전화상으로 이런 요지의 문답을 하였다.

기자 :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억제력

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 북한이 확실히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

트럼프 :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와 주요 언론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언론은 이런 바닥 민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던 핵우산을 받치던 마지막 선택은 그들 몫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왜 한국과 일본은 안 되는가.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는 걸 누가 믿는가. 미국에 버섯구름 피어오르는데 서울, 도쿄 하늘에 핵우산을 펼치려 미국이 굶은 날씨에도 태평양 건너 날아올까.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에도 정부에 대하여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이 점에서 분별력이 있다. 동아시아는 급변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깊은 바다라도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잘려진 허리만 있을 뿐이다.

2014년 12월 25일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도쿄에서 전후 70년 국제정치 지각변동 대처방안을 주제로 국제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전쟁에 함께 했지만 미국이 일본처럼 자국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한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을 투입해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핵잠수함을 가지고 여기엔 핵탄두가 실려 있다.

이들 중 한 척은 항상 해저를 향해하다가 만약 아국이 공격 받게 되면 수 천 km 떨어져 있다 해도 핵탄두를 적국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 침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할 수도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핵을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각본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핵폭탄 몇 발을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순항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시간이 80~90분 정도 길어진다.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민족감정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하여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습식 재처리 시설과 몬주 고속증식로를, 한국은 레이저 농축과 고풍 기술, 순항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은밀히 반길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 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하면 3개월 내에 700kg짜리 10kt 핵폭탄을 폭격용으로 만들 수 있다. 24개월 내에 50개 가까이 양산할 수도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1000발(중국은 500 발정도), 120 대 전략 폭격기, 36척의 핵잠수함을 가질 수도 있다.

20조 원에 가까운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1%에서 3배로 늘어날 것이다. 일본 국민은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 100개를 가지려면 10조 원 정도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북핵을 허리에, 일핵을 이마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북한에선 3대 세습독재자가 핵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에는 말릴 이가 없고, 남에는 막을 길이 없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보유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한국의 명운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다.

벌써 한국을 따돌리고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담판 짓는다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고가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핵의 바다 속에서 핵이 없는 한국은 침몰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총선은 핵공약 없이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선 적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와 거국적 핵안보 체제란 주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제 살 길을 찾아야 할 한국을 향하여, 한국이 결심만 하면 무서운 핵 잠재력을 가졌음을 일깨우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본토가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를 거점으로 반미 무장 투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핵개발연구소까지 한반도 모처에 만들었다고도 한다. 중국이 북핵을 방치하면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형국

이 된다.

아직은 한국도, 중국도, 북한이 설치한 핵 도미노는 필연적이며 결국 중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과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만있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면 세계 역사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 세대를 어떻게 비출 것인가.

트럼프의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13일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무장이 어렵다면 완전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얻는 이른바 '핵 주기 완성'을 통해 유사시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핵무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핵 주기 완성'을 허용할 가능성도 낮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가 성향을 볼 때 협상의 여지는 있다.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재처리와 농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을 전제로 핵개발 가능성 자체를 없앴 것이다. 정부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조건부 저농축과 제한적 재처리만 허가받았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

반면 한국과 같은 처지였던 일본은 1988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완전한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현재 일본은 보유 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유사시 핵탄두를 10000발 넘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자체 핵개발 포기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핵우산이 접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핵우산을 제때 펴줄지 의심스럽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을 이유로 주한 미군 감축 운운한다면 우리는 재처리와 농축권 요구로 대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미일 원자력 협정이 2018년 만료돼 미국과 일본이 조만간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를 지렛대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재협상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한국에 대해 전면적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면 미국 입장에서 핵비확산이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70년대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이미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 한반도비핵화란 대전제를 허물면서까지 한국과 원자력 협정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일본은 지난 7월 27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추출해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리 플루토늄

의 총량이, 2015년 말 48톤으로 이 중 핵분열성 물질은 32 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48톤 중 국내 보관량은 전년과 같이 11톤, 해외 보관량은 영국에 21톤, 프랑스에 16톤 등 37톤이다.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한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이 약 1톤 정도 남아 있어, 영국의 공장이 조업을 마치는 2018년경까지 그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 위탁은 이미 종료됐다.

국가 핵연료 주기 정책은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추출한 플루토늄을 고속증식로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고속로 몬주가 영구정지되고, 대체 방안인 경수로 원전도 재가동이 지연되는 등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해, 일본이 소비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량만 늘리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레이저 농축법은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쏘아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기술로 고농축에 적합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전력회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레이저 농축기술 연구조합'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 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

견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지난 11월 17일 회담에선 아베가 요청하는 안보 면에서 미일 동맹의 현 수준 지속과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면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를 교환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유동성이 커 보인다. 위기라 낙담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람직하게 전향(轉向)할 기회일 수 있다. 트럼프의 파격과 돌출 행동을 우려하기보다는 미국 정책을 여백의 미학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구한 우방도 없다. 북핵으로 조성된 현재의 동아시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젠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고려해볼직하다. 일본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력할 경우 미국 억제 및 방어력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일본의 막강한 정보력도 한국에 유용할 것이다. 한미일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갈수록 심각해질 북핵 위협 앞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도 있다.

N&M

[illegible]

[주제발표 ③]

중북 핵공모의 위험성과 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 대만

- 중북 핵공모에 의한 안보균형 붕괴 가능성과 아시아 국가들 간 핵무장 협력 필요성 강조 -

린 치 하 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I. 들어가며

2016년 북한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며 총 2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무장도발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긴장상태가 발생했다. 그 이외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도 북핵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입장은 아직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엔의 수차례 대북제재는 항상 중국으로 인해 제재효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기술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도달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미사일은 주변국에 대해 거대한 압박감을 주었다. 이미 핵능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에 있는 대만은 어쩔 수 없이 과거 있었던 핵무기를 다시 개봉하여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만은 중국과 아직 휴전 및 평화협정 없는 상태에서 미국, 일본과 연합해 자신의 안보문제를 지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일본은 핵무장을 발전하면 대만이 이어서 핵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글은 먼저 대만 과거 핵무장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 북핵문제에서 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한다. 마지막은 대만이 핵무장을 재배치하는 가능성 및 조건을 설명한다.

II. 대만의 핵기술 및 핵무기의 발전사

대만은 1968년부터 중국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핵무기를 개발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IAEA가 개입해서 1980년대 모든 핵무기에 관련된 부분을 공식 봉쇄했다. 대만의 핵에 관련된 발전과정은 주로 2시기로 구분됐다.

1. 장개석 시기 : 1968-1976

대만 핵기술과 핵무기개발의 계기는 1964년10월16일 중국이 신장(新疆)에서 핵실험을 성공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63년 대만 총통 장개석은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 주석 Ernst David Bergmann의 도움을 받고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대만핵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장개석 시기의 대만정부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의 경험을 참고하고 자기의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결심했다. 1964년 장개석은 장경국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하고 대만의 첫 번째 핵기술개발프로젝트인 “신죽기획(新竹計畫)”을 시동하기 시작했다. Bergmann은 대만의 핵기술과 무기개발의 핵심인물이었다. 1968년 대만 정부는 핵연구에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립청화대학교에서 실험용 핵반응로를 설치하고 핵전문가와 연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산과학연구원(中山科學研究院)을 설립했다. 현재 대만 군수무기의 연구기관인 중산과학연구원의 첫 번째 연구항목은 바로 핵기술이었다. 1969년 대만정부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중수 핵반응로를 구입했다. 동시에 대만중산과학연구원에서 핵연구영역의 연구소를 몇 개를 설치했다.

물론 당시 대만내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 과학자가 있었지만 전쟁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써서 군사적 우위를 취득해야하는 것이 대만의 대중전략이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대만정부는 군대학계 출신의 전문가들이 모여 핵기술과 실험을 진행했다.

1972년 다른 핵무기개발프로젝트 “도원기획(桃園計畫)”을 시작했다. 대만은 이 계획을 통해 임계점 실험을 했다. 1970년부터 대만은 미국에서 제1,제2,제3 핵발전소의 시설을 구입했다. 그리고 제4, 제5 핵발전소의 건축계획도 세웠다. 특히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한 후 장개석은 대만의 중수로를 통해 고농도의 플루토늄의 생산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탈퇴선언을 통보했다.¹⁾

그러나 1975년 4월 장개석이 사망하고 대만핵무기 개발을 도와준 Bergmann도 다음날 사망했다. 1976년 장경국이 행정원장(국무총리) 명의로 국가수반을 대행했다. 같은 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정부는 대만 핵시설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IAE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만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주대만 미국대사 Leonard S. Unger는 주미 대만대사에게 항의했고 거대한 국제압력을 가했다. 대만정부는 미국으로 인해 핵기술의 발전계획은 잠시 중지했다.²⁾

2. 장경국 시기: 1978-1988

장경국은 1978년 대만총통으로 취임한 후 2차 핵기술 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차 핵개발은 1차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했다. 대만정부는 1980년까지 인산제련공장, 이산화 우라늄제련공장 등 관련제련시설을 건축했고 600w 중수로의 건축설계도 진행했다. 1985년 이산화 우라늄과 연료봉을 생

1) 대만 중국시보 2016년2월20일

2) 대만 연합보 2016년2월21일

산하기 성공했다. 1986년 대만정부는 병둥구봉기지(屏東九鵬基地)에서 소규모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처음에 일어난 핵실험이다. 이 시기 대만은 핵무기를 거의 발전완성의 단계 들어갔지만 1988년1월9일 중산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소 부소장과 육군군인이었던 장헌의(張憲義)는 CIA의 지원을 받고 대만의 핵기술자료를 가지고 도미(渡美)했다. 당시 계속 대만의 핵개발을 반대한 미국은 장헌의 제공한 자료에 의해 대만정부에 강력한 외교압력을 행사했다. 다음 날 오후 이 사건을 알게 된 장경국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그 이후 권한 대행인 부총통 이등휘(李登輝)는 미국의 핵무기 폐기요구를 받았고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알렸다. 그와 동시에 미국정부와 IAEA는 대만 중산과학원 원자력연구소에 가서 핵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몰수하고 중수로를 강제로 경수로의 수준으로 개조했다. 또한 과거 대만정부 가지고 있었던 연료봉을 3차례로 나눠 모두 미국 본토에 보냈다.³⁾ 그리고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이 제공한 연료를 필요해서 미국의 조건을 받아서 과거 발전했던 핵기술과 제조 등 프로젝트를 중지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만 핵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압력 인해 핵탄두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핵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과거 대만은 핵기술을 발전하면서 동시 중거리미사일인 천마미사일(天馬飛彈), 단거리미사일인 청봉미사일(靑峰飛彈)을 개발해본 적이 있다. 그 중 이스라엘의 기술지원을 받고 제조된 청봉미사일은 1981년 국경일 열병식에서 공개했었다. 그러나 이 무기개발계획은 미국의 반대로 전면 중지되었다. 현재 대만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기술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다시 재배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핵기술의 발전역사를 시간대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만 핵기술의 발전사⁴⁾

시 간	내 용
1964	중국 첫 번째 핵실험 신장에서 성공
1968	대만 중산과학연구원을 설립
1969	중산과학연구원 밑에서 원자력연구에 관련된 4개 부속연구소를 설치. 캐나다의 도움을 받아 대만연구시설을 건축
1971	중산과학연구원은 핵시설 임계점 시험운전
1976	미국매체는 대만이 핵무기를 비밀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
1977	미국이 대만에 항의하여 핵반응로 운전중지를 요청
1978	대만 핵반응로는 미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다시 운전하기 시작
1981	중산과학연구원은 농축 우라늄의 제작문제를 극복

3) 대만 자유시보 2016년4월27일

4) 2016년2월21일 대만 연합보

시 간	내 용
1986	대만은 단기간 핵무기를 제작기술을 확보. 병동구봉기지(屏東九鵬基地)에서 소규모 핵실험을 비밀 진행
1987	중산과학연구원의 연구비용은 7.2억 달러정도 도달했고 국방예산의 9.4정도 차지
1988	중산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소 부소장 장헌의(張憲義)는 미국에서 대만의 핵무기비밀 발전과정을 공개

Ⅲ. 대만과 동북아의 관계

1. 대만의 세력균형 전략

사실 대만은 북핵문제와 직접관계가 거의 없고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대만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협상하면서 양안관계를 교환조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중시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만의 안보문제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대만 외교정책은 “친미화중우일(親美和中友日)”의 원칙에서 대외전략을 계획한다. 즉, 주변 강대국의 관계를 따라 행동한다. 친미(親美)는 미국과 비공식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뜻이다. 화중(和中)은 중국과 평화관계 혹은 현재 분치(分治)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일(友日)은 지리에서 전략적 협조와 고위급 대화관계를 유지하고 영토쟁점 혹은 다른 쟁점에서 공동적인 안전의식을 기초하여 일정한 묵계(默契)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제 대만은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의식을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만의 관점으로 보면 북핵문제 및 핵기술 확산의 문제는 몇 가지의 영향이 있다. 첫째, 북한이 만약에 핵보유국의 자격을 받게 되면 기존의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파괴된다. 둘째,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결합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지역의 국가에 커다란 위험성이 생긴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술이 다른 제3세계국가 혹은 다른 무장단체한테 유출하게 되면 동북아지역이나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내부분쟁이 없도록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통일보다 현상유지를 더 원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중국과 냉각된 관계가 된 것 같지만 김정은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으므로 김정은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해서 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핵무기도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대만이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지한(知韓)의 소리”도 일어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북한문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상의하면서 미국에 對대만의 군사지원을 단절하라고 하면 한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대만은 거대한 손실을 받을 것이다. 어떤 대만중소기업회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북한에 전자부품을 불법 수입한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북핵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만은 기존의 세력균형전략에서 남북한 문제를 더 확실하게 전략이나 입장을 있어야 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북핵문제와 북한-대만관계

과거 대만은 한중수교를 보복하기 위해 과거 냉전시기 관계교류 거의 없는 북한과 교류관계를 발전했다. 1992년 이후 유연성 있는 외교노선을 채택한 대만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과 수차례 고위인사방문을 했고 1998년 대만전력공사가 북한과 핵폐기물이전계획을 맺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만의 정확한 대북정책은 아직 찾을 수 없지만, 북핵문제에 대해 반대적 입장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북한-대만관계를 보면 대만은 북한을 통해 한중수교를 보복하고 중국의 외교봉쇄를 돌파할 시도를 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대만의 식량지원과 농업지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대만은 체제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없다. 당시 대만과 북한의 교류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갈 정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1992-2000년 사이에 북한에 하나의 중국을 어기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00년 이후 북한-중국관계의 회복되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무장도발 등 행위를 강행해서 북한과 대만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

대만은 제한적 국제지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정상국가관계를 가질 수 없고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협조도 없는 상황에서 자보(自保)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에서 제일 쉽게 인식된 부분은 바로 주변국 핵무장의 도미노 효과이다. 대만은 국토, 재래무기 등 부분에서 중국 및 주변국과 상대적 약세(弱勢)이기 때문에 군사와 외교 등 영역에서 비정규적 비균형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만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영도분쟁(다오위다오; 釣魚台列島)은 북핵문제보다 더 엄중한 문제이고 더 직접적인 안보문제이다. 만약에 일본자위대가 일반군대로 전면 발전

하면 중국과 과거 이미 쌓였던 중일영토와 역사분쟁은 더 악화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만은 자신의 안보문제, 지역관계 등 현실조건을 고려해서 일본과 동맹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대만이 북핵문제와 핵 확산으로 인해 일본의 전략동맹을 발전하게 되면 양안관계는 불가피하게 과거 1950년대처럼 전면 대치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가 중일간의 영토분쟁, 양안관계 등 2차적 영향을 줄 것이고 과거의 진영외교나 공포균형으로 구성된 신(新)냉전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

IV. 최후의 도미노: 대만핵무기 재배치

대만은 핵무장의 재배치는 여러 선천적인 조건이 있다. 대만의 핵무기 재배치는 핵 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이다. 먼저 한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이 이미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의 발전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은 핵기술을 다시 시동하고 핵무장을 제조와 선언 등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대만이 한국, 일본처럼 핵무장을 발표하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대만과 가까운 동남아지역까지도 핵 확산 연장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대만의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몇 개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이 묵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인증카드를 취득할 때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격을 인증되면 주변국의 핵무기 배치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자신의 대외무역을 통해 핵기술, 장비 등 제3국, 단체한테 유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에 관련된 대규모 무장충돌, 긴장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이 핵기술 혹은 봉인된 경수로 등 시설을 다시 재운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핵무장을 재배치 혹은 핵기술을 재개발을 선언할 때다. 특히 일본이 자위대를 일반군대를 승격하면 중국과 전면 대결의 국면에 들어간다. 또 일본이 핵무기, 장거리미사일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 대만이 과거 폐지된 핵무장, 장거리미사일의 재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전될 경우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핵무장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동해에서 영토분쟁 인한 군사대치는 더 심화되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을 막기 위해 대만은 일본과 안보에서 연합해서 중국에 대항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병력과 보호를 철수하고 양안관계는 정치, 군사 방면에서 완전히 중국으로 기울어질 때다. 대만이 핵무장을 재시도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미국을 토해 비공식 군사동맹을 유지했는데 외부 지지의 힘이 없어진다면 자기의 힘으로 전략균형자(Strategic equalizer)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대만이 핵무기의 재폐치의 가능성에 대해 몇 개의 조건을 통해 설명했다. 지금은 대만, 일본, 미국, 중국 등 중국 동해지역에서 미묘한 삼각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각 동맹관계를 맺어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세력균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핵문제를 대해 중국과 상의 하고 미국이 대중정책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⁵⁾ 미국이 대중국정책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핵문제를 해결책을 찾은 것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마중 양국 간에 아직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답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지금 대만의 재래식 무기는 중국과 비교적 약한 편이고 미국과 불확실한 동맹관계 있어서 핵무기를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약소국인 대만은 공포의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만은 지속적 핵무장을 가지고 중국과 기장된 군사대치를 하는 지속력이 없다. 일단 핵무장 도미노의 국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약소국의 균형적인 전략삼각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약소국한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유리한 방법이다.

5) New York Times 번체 중국어판, 2016년 11월28일.

MCM

[illegible]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회 북핵포럼 세미나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China-North Korea Nuclear Collusion and Future Security Order in Asia)

토론

[토론①]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송 영 선

前 국회의원/ 경남대 석좌교수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지켜온 defense 전략은 “예의 주시” 전략이다. “예의 주시”라는 방어 무기는 효용성이 제로다. Deterrence효과도 아예 없다.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눈을 떼지 않고 관찰만 하겠다는 것이다. 쓸모없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펜타곤 지붕위로 핵폭탄을 날려서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까지 갈수 도 있는 핵을 개발하여, 서울을 통째로, 날로 접수할 수 있는 협상을 미국과 둘이 하자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다. 이춘근 박사 논문에서 말하듯이, 북한은 서울을 잿바다로 만들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있는 그대로 접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 핵 무기 개발은 서울과 싸우지 않고 서울을 접수하기 위한 대미 협상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예의 주시” 한 후에 우리도 반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 핵 실전에 배치가 동북아의 세력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 없이 내 뱉는 무책임한 Wishful-thinking의 발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북한 핵 실전 배치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북한 핵 개발을 방기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THAAD 도입에 대해서는 강경모드를 취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오면 핵이 없는 한국의 전략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하든지이다.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운운 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거두어들 일 위협까지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을 포위한 모든 국가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가세한 핵무기 보유는 한국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 문제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적극적인 관여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일본 핵 무장은 일단 고삐를 풀면, 빠른 시일 내 중국의 핵 능력을 추월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중국을 능가할 정도의 핵 개발 인력, 기술, 핵물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핵 무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핵을 방기해 두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서균렬 박사님의 ‘한-일 공동 핵 개발’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한-일간의 감정적인 거부감이나, 북한 핵 개발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에 가져올 시한 폭탄이라는 현실 인식이 약한 현 시점에서는 그 용어 자체의 예민성이 기술적인 필요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본다면, 북한 핵 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가능성이나,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더 크게 펼쳐질 가능성, 나아가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시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주도해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 해도, 평화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한다. 북한 핵무기가 우리의 안보 위상을 밑바닥에서부터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핵을 가진 김정은 밑에서 사는 것이, 김정은과 전쟁 벌려 죽는 것 보다는 낫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

린치하오 교수님의 ‘대만의 핵무기 배치는 핵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말은 중국이 북한 핵을 계속 방기해 두면, 그로 말미암아 대만은 자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불가피하게 핵을 갖게 될 것이고, 내키지 않지만, 자신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동맹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만의 핵 보유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남아 지역까지의 핵 확산의 씨앗까지도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아시아 전역의 핵 확산의 고리를 중국이 끊어달라는 간곡한 바람인 동시에 결국 북한 핵무기 방기의 부메랑은 중국으로 되돌아간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국제 정치학자, 한스 모르겐소우 교수가 말한 “핵무장한 국가와 핵 무장하지 않은 국가가 싸울 경우, 핵을 갖지 않은 국가는 핵을 가진 국가에게 핵으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무조건 항복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뿐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보전략을 선택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토론②]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토론문

송 대 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미래한국 편집위원

1. 서균렬 교수의 발표문은 (1)일본 핵 개발의지, (2)일본의 핵개발 능력, (3)일본 핵개발 가능성 등을 간결하고 알차게 잘 정리한 훌륭한 발표문임

2. 일본은 핵보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심만하면 단시간에 일본자력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실제 실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내용들은 일본의 핵 개발관련 현 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

- 일본은 고농축 우라늄 4t을 빼돌려 비축해놓고 있으며 일본의 핵 제조 원료는 5kg 탄두 (고농축) 800발 제조 가능
 - 10t의 Pu를 비축하고 있는 원료는 핵탄두 5,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 24개월 내 50개 제조가능
 -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1000발 (*중국은 500발), 120대 전략폭격기, 36척 핵 잠수함 제조가 가능함
 - 3개월 내 700kg 짜리 10kt 핵폭탄을 폭격용으로 만들 수 있음
- ⇒ 상기와 같은 일본의 핵 제조 능력은 일본을 사실상 “준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

3. 서균렬 교수가 제시한 북 핵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생존권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한·일간 공조” 가능성 문제는 가능성 차원을 넘어 대단히 합리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화”로 인해 제일 치명적인 피해 가능성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임.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생존권 차원에서 목 앞에 비수(匕首)가 겨냥진입해오고 있는 형국과도 같음. 비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독방어보다는 공조할 수 있는 공조는 다 하여야만 함

(2) 북한 핵에 대한 생존권 차원에서 화급·절박함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함. 사사건건 미국공조에 의존하여 대처할 사항이 아님 (이스라엘 사례와 같음)

순조롭게 미국과 공조가 되면 그 공조를 거부할 이유는 없음. 미국의 국가이익차원에서 공조여부가 결정되는 미국공조에만 한국과 일본이 생존권을 맡겨놓고 애걸하는 소극적인 생존권 확보 방안은 북한 핵에 대한 지혜로운 국가생존책이 아님. “America First!”와 “Korea/Japan First!”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이나 일본은 지상지고의 가치인 ‘국가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음

(3)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제조 능력과 의지의 상호공조는 한국/일본의 개별적인 대응책 마련 전략보다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증대될 수 있음. ① 한·일간 상호공조는 핵 제조기술상 up-grade 가능성, ② 제조원료 확보용이, ③ ‘정당방어’차원에서 목소리 증폭 등으로 핵 제조에 필요한 소요시간 단축 가능함

(4) 한·일 공조는 ‘한·미·일’ 3국 공조에서 미국협조의 용이성

(5) 한·일 공조는 중국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 효과 등

[토론③]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무엇보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영 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냄비 속의 개구리

개구리를 처음부터 물이 끓는 냄비 속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 이 우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굳이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외과적 타격을 하려 했을 때 김영삼 정부가 이를 말린 것도 오늘의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은 거의 완성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량화·경량화 그리고 발사체의 개량을 완성하게 되면 그 끔찍한 결과는 쉽게 내다볼 수 있다. 이춘근 박사님의 지적대로 북핵은 중국을 겨냥한 것도, 미국을 겨냥한 것도, 일본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전쟁과 굴종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동반한 각종 요구를 거듭해 오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날마다 얻어터지고 돈을 뺏기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부에 따라 활용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었다. 하지만 이춘근 박사님의 지적대로 이 전제는 잘못되었다. 핵 능력을 완성했을 때 부수될 엄청난 편익을 아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제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다. 국제제재는 지금까지도 통하지 않았고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개방경제가 아니다. 그만큼 제재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미온적 태도이다. 어제(11월 30일)도 유엔이 강력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큰 소용이 없을 것이다.

□ 중국이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여론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골칫덩어리일지라도 북한이 남아있는 게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다. 여전히 중국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입장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략의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시킬 가능성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뿐일 것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빅딜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핵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적다. 이란과의 빅딜에서 보듯이 미국은 기껏해야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정도로도 그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괜찮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북핵문제에 사활이 걸린 것은 한국뿐이다.

□ 어떤 선택?

좁은 기회의 창, 북한의 핵시설 파괴, 이것도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게 상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억지력의 확보를 위해 전술핵 재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독자적 핵능력의 개발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개방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견디기 어렵다. 결국은 국제사회의 용인이 필요하다. NPT가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NPT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식의 공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서 교수님과 린치하오 교수님의 글은 일본 대만 등과의 핵 협력하고, 핵 도미노의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 정치지도자들의 인식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식의 인식은 곤란한 상황이다. 운명은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실현된다. 오이디푸스도 박근혜 대통령의 예만 봐도 그렇다. 전쟁도 다르지 않다. 전쟁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때만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서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설사 50만, 100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북한의 꾀책 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토론④]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김 민 석
중앙일보 기자

지난 9월9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에 따른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급속하게 핵 위기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앞서 발제자들의 발표대로 김정은의 핵 보유 의지를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사실상 지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

김정일이 핵 보유를 목표로 정권 유지와 대외 협상 등 다목적 카드로 핵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기존의 핵국가들이 핵무장을 위해 추진해왔던 절차와 유사하게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속도를 보면 핵무장은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지난 5차 핵실험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해볼 때 북한은 내년 안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의 실효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확보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ICBM급인 KN-08(또는 KN-14)의 2단 및 3단 로켓이 최근 연속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의 로켓엔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소련 해체 직후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련제 R-27 로켓 엔진으로 무수단미사일을 비행시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2007년 실전 배치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무수단미사일을 8번 발사했지만 딱 1번 성공하지 못해 무기로서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이 최근 증명됐다.

두 번째는 북한의 ICBM 개발이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은 KN-08의 비행시험을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개발과정에서 5~10번의 비행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북한의 ICBM 발사시험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도전장을 정면으로 내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미국을 타격 목표로 하는 ICBM 발사시험을 용납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북한의 ICBM 개발은 국방정보본부의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보본부는 당초 북한의 ICBM 개발을 5년 정도로 보았다가 최근 3년으로 앞당긴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ICBM을 개발해 미국과 군축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
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한국과 일본을 동시 협박하고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
수시로 재래식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북한은 과감한 재래식 도발을
시도해올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북한 핵무기의 파괴력에 당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오면 상황은 더 심각
해진다. 내년까지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서다.

북한의 가시화된 핵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도 Kill Chain, KAMD, KMPR(대량응징보복) 등 3K라
는 3축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응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Kill Chain과 KAMD은 이미 존재하거나 구축중인
계획이고 KMPR은 새롭게 제시한 방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MPR은 한국군 단독작전으로 이뤄지
며 작전 대상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전쟁지도부다. 그러나 KMPR에는 문제가 많다.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을 때 시행되는 작전으로 그 시행 과정에 두 가지 모순이 있
다.

첫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때면 북한의 전쟁지도부는 당연히 지하 전쟁병커로 이동한
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전쟁지도부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
다. 또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병커는 한국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가 없다. KMPR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특수부대 또한 완전 통제된 북한군의 지하병커를 침투해 김정은을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상황이면 전군이 전쟁준비태세에
돌입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군도 이미 데프콘 2,3이상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상향된 상태가 된
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전환된다. 말하자면 한국
군의 중요한 전력자산이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 단독이란 용어를 사용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KMPR의 수단과 시행방법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핵옵션의 단계적 검토

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계층에서 핵옵션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제공하
는 핵우산의 신뢰도와 ‘핵에는 핵’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핵무장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핵무장에 국민 58%가 지지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

도에 다시 배치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한국이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핵무장은 당장 1992년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치된다. 또 핵무장을 하려면 핵비확산체제(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핵무장을 추지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원자력협정으로 인한 한·미간 갈등은 북한이 바라는 바다.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저항도 매우 클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또한 현재로선 한·미 정부 모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술핵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핵없는 세상’ 정책에 모순된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은 협상팀을 꾸려 이러한 문제들을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에 적극 입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배치돼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트럼프의 새 행정부와 협의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되면 전술핵도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앞서 몇 가지 핵옵션을 구상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단계) 미 전략폭격기의 핵무기 실무장 한반도 기동시위

북한 핵실험과 핵위협 등 상황이 발생할 때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공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에 전개하는 B-62 등 전략폭격기에 실려 있는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는 전략폭격기의 무기고가 비어있거나 재래식 무기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전략폭격기에 실제 핵무기를 탑재하고 그런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알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유사시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술핵 한·미 공동운영

북한의 핵사용 임박 시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전술핵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반입해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반입한 뒤, 양국 공군 전투기에 함께 장착하고, 북한 전쟁지도부의 지하병거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제거된다는 등식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미군의 전술핵 가운데서도 최근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전술핵폭탄은 지하에 침투해 병거를 파괴할 수 있다. 미군 당국은 이 신형 전술핵폭탄은 낙진 피해가 적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쟁지도부 지하병

커는 민간인이 거의 없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 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민간의 낙진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 방안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한·미가 이 방식에 합의해 발표하면 북한의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가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벙커를 무너뜨려 모두 압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B61-12를 2018년부터 공군에 도입될 F-35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해 작전한다면 언제든지 북한 상공에 침투해 북한 전쟁지도부를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반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 전쟁지도부 내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

둘째는 미국의 한반도에 핵우산 사용 결정에 따른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고 한국 공군기에도 전술핵을 장착해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부담이 1/4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사전에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대통령이 미군 전술핵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한·미가 합의해두어야 한다. 둘째,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의 공동사용을 요청하고 양국 정상의 협의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 방안이 합의되면 북한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대외에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의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까지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트럼프 인수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3단계) 핵무장 준비선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위기 상황이 되거나 미국이 전술핵 공동사용을 거부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옵션이다.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등은 시행하지 않지만 사전 조치로 의지를 표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1차적으로 대북제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 준비선언이 일본과 대만으로 파급돼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은 준비선언을 하기 전에 중국과 사전 협상을 통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는 핵무장 준비선언 이후에 북핵의 위협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미국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다. 핵무장 준비선언을 기반으로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핵무장 준비선언 이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은 필수적이다.

시행방법으로는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핵무장 준비를 선언한 뒤, 핵비확산체제

(NPT)와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방안, 법적 문제와 핵무장 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전 준비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따른 불편함과 국제적인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결심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1·2·3단계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으로부터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이어서 핵무장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어려운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국가의 리더십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여기에 덩달아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여러 가지 안보대책과 핵옵션을 판단하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국가의 리더십 안정돼야 한다.

[토론⑤]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정 충 신
문화일보 부장

□ 북한의 전면전 능력과 의도

- 북한 김정은 발언 통해 본 핵무장
- 북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유일한 나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이용필 국장 2016년 10월 16일 미국 NBC 방송 인터뷰 “우리는 6차,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유엔 미국의 제재도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 “선제 핵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 북 지난 7월 탈북해 남한에 온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 공사가 영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내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압박을 느껴 탈북했다는 주장 제기.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 2016년 10월16일 외교 소식통 인용 보도 “영국 국방부 관리와 해군 장교를 100만 파운드(14억원)에 매수해 핵 기밀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아
- 정보당국자. 태영호 “북한이 대선 치르는 내년 말까지 6,7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 계획” 주장
- 탈북자 한종섭(전 경찰총국 문관 근무. 2014년 탈북)최근 강연회 ‘북핵대응 실패의 원인과 평화적 북핵 제고 방도’에서 2014년 탈북 당시 북한 세습독재 핵전략은 “충분한 핵전력 준비단계→그에 토대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단계→군사적 대응에서 약세에 몰린 남한에 대한 핵공갈 위협 강화와 남한 내 중북 세력에 의한 남한 사회 핵공포 확산 단계→국민을 핵인질로 잡힌 남한 정부의 대북자금 지속적 상납 단계→남한을 북핵 노예로 완전 전락시키는 단계→북핵 위협의 현실화에 따른 투자시장의 급격한 감소, 국내 자본의 해외도피 현상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퇴보, 몰락 상태까지로 규정. 남은 기간을 10년 안팎 전망”

□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새로운 접근’(2016년 1월 18일)에서 “북한군 전면전 감행 상황 시나리오. 북한군이 공세종말점에 도달한 이후 한미연합전력이 반격작전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김정은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고, 이때 그는 최후의 주사

위를 던지는 심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 “북한이 2차 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 미국은) 대규모 군대를 북으로 보낼 수도 없고,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무부 교육기관인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벤 잭슨 부교수가 6월 16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인들에게 한 말.

- 북핵이 ‘2차 핵 보복 능력’ 문제로 더 심각해지고 있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미국 핵우산이 작동할지 미심쩍고, 핵 공격을 하면 핵 보복을 당해 공멸한다는 ‘공포의 균형’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왜? 북핵이 양적, 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고 있기 때문임. 핵이 많아지면 북한은 1차 핵 교전 이후 2차로 핵 보복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됨. 이는 유사시 군사전략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짐

- 노트르담대학의 키어 리버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대릴 프레스 교수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2차 핵 보복을 우려해 아예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 “북한 수뇌부나 핵 시설을 겨냥해 핵 반격을 하거나, 재래식 군사작전만 퍼더라도 북한의 2차 핵 보복을 우려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 지하 120m 아래로 숨은 북 수뇌부는 미국의 핵 반격에 견재할 것이며, 북한 주민만 살상

-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략가 중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 경우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이라 주장 제기. 미국의 핵우산이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조지타운대 키어 리버 교수와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 뒤 미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 미군이 군사작전의 중지를 결정하는 상황. 리버·프레스 교수는 “북한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갖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 2차 핵보복 능력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 두 번째 상황은 북한 수뇌부를 겨냥해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

- 두 교수는 “민간인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를 단번에 처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 세 번째와 네 번째 딜레마는 재래식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경우, 북한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하는 경우. 역시 북한의 핵시설이 지하화 되고 견고하게 구축된 시설에 위치해 있을 경우 북한의 제2, 제3의 핵 공격에 한국군과 한국민을 노출시킬 가능성 우려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이들 시나리오는 그동안 한국군이 상정해온 비핵·전면전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고 평가

□ 핵무장에 대한 국내 찬성 여론 증가

- 핵무기 보유 찬성률 58%. 한국갤럽이 9월20-22일 전국 성인 101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핵무기 보유 찬성에 58%, 반대 34%. 여야 지지층 불문 찬성 비율 높아
- 야당 내에서도 핵무장론 제기. 김종로 국민의 당 의원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을 고민할 시기”
- 중국의 입장. 북핵 없애겠다고 북 정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기본 원칙

□ 핵 무장론 의미

- 미 전략자산자산. 전략폭격기인 B-52, B-2는 광에 두더라도 B-1B 폭격기 등은 동해 핵잠수함 상시 순환 배치 효과 끌어내는 등 다목적 포석 염두에 뒀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9월12일 문화일보 인터뷰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속도 고려하면 원자폭탄은 물론 앞으로 3-4년 내 수소폭탄과 ICBM과 SLBM 모두 실전배치 가능성 높다”고 주장. 우리핵연구회 출범. “한국이 핵 무장을 하는 데는 대략 18개월 필요. 북한이 수소폭탄과 SLBM 모두 보유하기 전까지 한국이 핵무장 완료하려면 남은 시간 많지 않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주장
- 한국은 북핵 실전 배치가 코앞에 왔는데도 아직도 켄 체인 KAMD도 구축 못해. 성능 한계 뚜렷. 유사시 북 지도부 제거 특수부대 하나 육성해 놓지 않아

N&M

[illegible]

MEMO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